

6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576.20 (-15.11)	807.03 (-0.96)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3.292 (-0.020)	1327.60 (-3.20)



비트코인 현물 ETF  
대통령실 재검토 제안에  
이복현, 전향적 전환  
03

## 저가폰 늘리는 제조사... 브랜드 이미지 훼손 우려도

### 통신비 인하 빛과 그림자

**정부 "단말기 부담 낮춰라"**  
글로벌 시장 대상 제조사들 난감  
요구 반영 위해 라인업 다변화  
삼성 상반기 갤럭시 A15·35 출시 유력  
최하급 모델 제외 모두 국내 풀어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판매중인 A시리즈. 통신사 전용으로 A54와 M44도 판매 중이다. 상반기까지 2개 이상을 추가할 예정이다. /삼성닷컴

정부가 통신 요금 부담 경감에 힘을 쏟고 있다. 통신 업계는 물론 단말기 제조사에도 가격 인하를 요청하고 나섰다. 다만 국가 경제 수준 대비 통신비 부담이 크지 않은데다가, 이미 다양한 가격대 단말기가 유통 중인 상황이라 그렇다할 묘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단말기 제조사들은 사업 전략 수립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관련기사 4면>  
6일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10일과 31일 각각 갤럭시 A15와 A35 전파 인증을 완료했다. 상반기 출시가 유력시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에도 갤럭시 A54를 SK텔레콤 전용 모델인 '갤럭시 퀴텟4'로, 갤럭시 M44를 KT 전용 모델

'갤럭시 점프 3'로 내놓은 바 있다. 올 초에는 갤럭시 A25도 출시했다. 갤럭시 A 시리즈는 보급형 모델로, 인도와 동남아시아 등 신흥 시장을 겨냥해 개발됐다. 한때 9개에 달하는 라인업으로 구성됐지만, 지난해에는 4를 제외하고 0부터 5까지 5개 모델로 출시돼왔다. 대신 국내에서는 판매량이 저조해 일부 라인업만 도입했다. 올 상반기까지 최하급 모델인 0번대를 제외하고 모두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다양한 라인업으로 더 많은 사용자 요구를 충족하겠다는 방침을 지켜왔다. 글로벌에서도 A시리즈와 함께 인도 등 특정 국가를 겨냥해 M시리즈도 출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국내에서까지 A시리즈 라인업을 확대한 이유가 지난해 단말기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실제로 최저가 모델인 갤럭시 A10세대 시리즈는

A13 이후 국내 출시가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2년만에 A15로 돌아왔다.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S23 FE도 갤럭시 S23 판매량이 견조한데다가 갤럭시 S24 출시를 앞두고 나와 판매 간섭이 우려된 바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전작과 비교해 가격 인상을 최소화했으며, 기기 반납 지원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새로 마련하며 실구매 가격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문제는 정부가 부담 완화 요구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 방통위는 지난달에도 삼성전자 영업 담당 임원과 실무진을 만나 추가로 협조를 요청했다. 이미 갤럭시 A15와 A35 인증을 마쳤거나 인증 단계 중이던 시점이다. 삼성전자가 단말기 지원금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내에 인도 등 해외에서 판매하고 있는 M시리즈 등 저가 스마트폰 라인업을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강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단말기 가격 책정과 제품 출시 등은 시장에서 결정해야한다며, 단지 소비자 부담을 줄여달라는 요청일 뿐이라고 밝혔다. <4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최재원·구본상 등 980명 특사 단행

**尹 대통령, 취임 후 네번째 "활력있는 민생경제 주안점"**  
윤석열 대통령이 45만여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을 비롯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이 명단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의 특별사면 단행은 취임 이후 네 번째로, 2022년 8월 광복절, 2022년 12월 신년, 지난해 8월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뒀다.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명에 대해 행정 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 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 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무회의 직후 법무부는 브리핑을 통해 7일자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은 총 45만5398명에 대해 실시하고, 모범수 942명도 가석방한다.  
우선,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행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제인 5명을 복권하기로 했다. 복권 대상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포함됐으며 나머지 3명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 내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의료계, 파업 예고

###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 19년 만에 정원 65% 가량 늘어 의협 "증원 강행 시 즉각 총파업"

정부가 오는 2025학년도 대입에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 지난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이후 19년 만에 정원의 65% 가량이 늘어나는 셈이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부족하나마 1만5000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돼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인력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00명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확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2023'에 따르면 국내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못 미친다. 복지부에 의하면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하

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당시 전공의 파업 등 의료계 반발에 의해 무산됐고, 복지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문제를 같이 협의하겠다는 9·4의정합의를 체결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해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 논의를 했으나 절대적인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복지부와 의사 수가 아닌 재배치 문제라는 의협의 입장이 부딪히며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이번 정부의 결정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 파업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대증원을 강행할 경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협은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의대증원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尹 "노사 문제,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돼야"  
▲이재명, 선거제 당론 추진 앞서 "본인 뜻과 달라도 흔쾌히 함께 해달라" /사진 뉴스1

▲윤재욱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에도 의사 수 충분하다 말할 수 있나"  
▲輿 정영환 공관위원장 "야당대표 유불리로 선거제 결정 유감"



▲홍익표, 조정훈 법사위 버티기에 "얼마나 구태스런 행동인지 돌아봐야"  
▲이원욱·조승천, 제3지대 세력에 통합 공관위 구성 제안 /사진 뉴스1